

방통위, 국민여론 무시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

신문협회, ‘공개질의서’ 채택 등 강력 대응키로 “타 매체 못 빼앗아 지상파 배불리기 용납 못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문·잡지·케이블TV 등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모든 매체와 시민단체, 시청자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강행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오는 18일 입법예고 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의 근거로 차별적 규제 해소를 들었다. 이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 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지상파 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해 공적기능 및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될 때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화면의 1/32)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 음성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고만 규정돼 있다.

정부의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강행에 대해 한국신문협회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들은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보내는 5개항의 공개질의서를 채택해 발행인 연명으로 발표하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신문업계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017년 신문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06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 11월 29일 이효성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지상파 방송을 배려하더라도 더 어려운 신문의 것을 빼앗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위원장은 “심사숙고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신문협회 발행인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효성 위원장에게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국민 60%가 반대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국민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방송에는 특혜를 주고 신문 등 타 매체는 준법기반마저 위협하는 미디어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상파 방송이 약속한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결과를 지켜본 후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 아닌지 △지상파에 대한 방통위의 특혜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상파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지 △부처 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질의서는 신문협회 전 회원사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채택됐다. ▶ 공개질의서 전문 2-3면

시민단체, ‘지상파 공영성’ 훼손 비판

정부의 중간광고 강행에 시민단체의 비판도 쏟아졌다.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이미 지상파 프로마다 광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지 않고 규제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신문협회와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정책을 왜 방통위가 굳이 밀어붙이는지 저의를 도저히 모르겠다”며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상업화로 인해 결국 지상파의 공영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법률개정안 발의”

한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전기료와 함께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현행 KBS 수신료를 별도로 납입고지 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12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 방통위를 향한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은 행정부의 권한에 속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법률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털도 ‘독과점 실태조사’ 받는다

실태조사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 향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유도할지 관심

포털이 뉴스시장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포털의 독과점 및 뉴스시장 점유율에 대한 실태조사의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가 ‘뉴스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가

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지난 12월 7일 부가통신사업자(포털)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실태조사는 특정 산업의 분야별 실태 파악을 통

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경쟁상황평가(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규제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등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그간 신문협회는 인터넷뉴스, 검색·광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포털이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경우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포털은 온라인 뉴스시장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기반으로 ‘언론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면서 뉴스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 특히 포털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거래조건 △뉴스 편집기준 △뉴스 저작물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다. 그 결과 포털에 대한 언론사의 종속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네이버, 다음 등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실태조사를 위한 대상,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한다. 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부가통신시장현황 뿐 아니라 공정경쟁 저해행위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 제출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등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공정경쟁 이슈 발굴을 위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다.

▶ 3면에 계속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제34조(경쟁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경쟁의 촉진) (좌 등) 〈신설〉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년 언론진흥기금 270억·지발기금 86억 확정

큰 폭 감소해 2020년 기금고갈 우려 현실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언론진흥기금이 내년에도 큰 폭으로 줄어들어 '기금고갈'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12월 8일 내년도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각각 269억7800만원과 86억49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언론진흥기금은 올해 예산과 비교해 61억6800만원(18.6%)이 줄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사업비는 7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7100만원이 축소됐다.

언론진흥기금의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 예산 269억7800만원 중 정부내부수입금(국고출연금)은 0원, 언론진흥재단 법인출연금은 250억 원, 여유자금은 16억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사업비는 △뉴스미디어진흥 110억

7000만 원 △뉴스유통구조개선 37억6600만 원 △언론공익사업 76억1800만 등 총 224억5400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4억 원을 줄였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예산은 총 86억4900만 원으로 대부분 국고출연금(80억 원)으로 충당했다. 사업비는 71억5000만 원으로 올해 77

억2100만 원보다 7.4% 줄어 편성했다. 사업별 예산은 △지역신문역량지원 20억5500만 원 △스마트미디어인프라지원 12억5000만 원 △공익성활동지원 38억45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 언론진흥기금 잔액이 42억8900만원에 불과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2020년부터는 기금고갈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 언론진흥기금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A)
수입				
□ 자체수입	20,797	20,605	25,378	4,773
1. 이자수입 등	2,231	159	378	219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80	9	-	△9
기타재산수입	2,151	150	378	228
2. 용자원금회수	3,566	446	-	△446
3. 기타경상이전수입(법인출연)	15,000	20,000	25,000	5,000
□ 정부내부수입금(국고출연)	-	-	-	-
□ 여유자금회수	14,939	12,541	1,600	△10,941
합 계	35,736	33,146	26,978	△6,168
지출				
□ 신문발전지원	22,862	22,866	22,454	△412
1. 뉴스미디어진흥	10,486	11,288	11,070	△218
뉴스콘텐츠인프라구축	8,091	8,283	7,983	△300
뉴스콘텐츠생산지원	2,395	3,005	3,087	82
2. 뉴스유통구조개선	4,172	3,755	3,766	11
뉴스유통지원	4,172	3,755	3,766	11
3. 언론공익사업	8,204	7,823	7,618	△205
미디어교육사업	3,673	3,026	2,675	△351
읽기문화진흥사업	2,751	3,017	2,943	△74
신문윤리심의회	1,780	1,780	2,000	220
□ 기금관리비	333	266	235	△31
□ 여유자금 운용	12,541	10,014	4,289	△5,725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B-A)
수입				
□ 자체수입	99	127	160	33
1. 이자수입 등	99	6	160	154
2. 경상이전수입	-	121	-	△121
□ 정부내부수입금	8,222	8,000	8,000	-
□ 여유자금회수	1,375	489	489	-
합 계	9,696	8,616	8,649	33
지출				
□ 사업비	8,612	7,721	7,150	△571
1. 지역신문역량지원	3,116	2,441	2,055	△386
기획취재지원	1,400	925	645	△280
지역여론활성화지원	1,326	1,126	1,070	△56
조사연구연수교육사업	390	390	340	△50
2. 스마트미디어인프라지원	1,641	1,341	1,250	△91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	1,100	800	600	△200
스마트인프라지원	541	541	650	109
3. 공익성활동지원	3,855	3,939	3,845	△94
소외계층구독료지원	3,000	2,000	2,398	398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855	1,939	1,447	△492
□ 기금관리비	595	587	593	6
□ 여유자금 운용	489	308	906	598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관련한 한

(사)한국신문협회의 회원 신문사 및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12월 12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1.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에 대해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국민에 맞는 부처입니까?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입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신문협회, 리얼미터)에서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부인합니까? 아니면 국민여론에 맞서겠다는 것입니까?

- ※ 신문협회 조사: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매우+어느 정도 필요하다’ 17.8%, ‘(전혀+별로) 필요하지 않다’ 57.1%.
- ※ 리얼미터 조사: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60.9%, 찬성이 30.1%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2배 높게 나타남.

2. 방송에는 특혜를 주고 신문 등 타 매체는 존립기반마저 위협하는 미디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문협회 조사연구 결과(2017년)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16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지·케이블TV·디지털 등 타매체도 해마다 176억~183억 원씩 줄어들어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상파TV 중간광고 재도입에 따른 타 매체 광고비 감소 규모 (단위: 억원)

매체	광고비 감소폭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문	201	206	210	213	216
잡지	50	50	50	50	50
케이블TV	108	110	111	113	114
디지털	18	18	19	19	19

<출처: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이 신문업계에 미치는 영향(한국신문협회, 2017)>

다른 조사에서도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에만 특혜를 주는 중간광고 도입은 미디어 시장 전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중대한 변수입니다. 매체 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경영여건이 취약한 신문과 군소·유료방송 등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신문협회는 최근 “지상파 방송을 배려하더라도 더 어려운 신문의 것을 빼앗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숙고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속고가 있었으며, 어떤 타협점이 발견됐습니까?

3. 지상파 방송이 약속한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결과를 지켜본 후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지상파 방송사는 잘못된 경영 및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자구 노력 없이 외부수혈 방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지상파 방송 방만 경영 사례
- ① KBS·MBC는 올해 상반기 각각 441억 원, 536억 원 적자를 기록함. 올해 나란히 1000억 원대 적자 예상. 그럼에도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의 1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율은 60%에 이룸.

KBS 연봉 1억이상 인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연봉1억이상인원(A)	2,597명	2,670명	2,759명
총원(B)	4,530명	4,604명	4,596명
비율(B/A)	57.3%	57.9%	60%

※ 출처: KBS 자료 재구성

- ② KBS: 광고수입이 2013년 5793억 원에서 2016년 4207억 원으로 급감해 영업 손실 상태인데도 해마다 승진잔치를 벌여 고액 연봉자 양산. 2016년 KBS의 인건비 비율은 35.8%로 MBC나 SBS 등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월등

加, 언론에 5050억 파격 지원

뉴스 제작에 소요되는 인건비 세금 환급 형식 언론진흥기금 고갈 방지, 한국 정책과 대조적

캐나다 정부가 언론사에 5년간 5050억 원의 세제 혜택을 준다. 지난 11월 21일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디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총 6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5050억 원) 규모의 세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방식은 주로 언론사가 뉴스를 제작하는데 드는 인건비에 대한 세금 환급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구독료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일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비영리 미디어 매체는 자선재단으로 지정해 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을 낸 독자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10년간 250개

이상의 언론사가 문을 닫았고 2012년 이후 종이신문 판매가 약40%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빌 모노 재무장관은 지난 11월 21일 하원에 2019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향후 5년간 총 6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세제 지원을 통해 미디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빌 모노 재무장관은 특히 “독립적인 뉴스 매체가 캐나다 민주주의와 커뮤니티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언론 지원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 정부는 세무 지원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2019~2020 회계연도 4,5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380억 원)를 시작으로 2023~2024 회계연도에 1억 6,5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1,392억 원)를 집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캐나다 정부는 지원 미디어 및 방식을 정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배제한 독립적인 자문기구를 구성할 것이라 밝혔으며, 자문기구 구성원은 언론계 종사자가 될 예정이다.

신문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앤 메일의 필립 크롤리 발행인은 “독립 저널리즘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약속과 지원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저널리즘에 개입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하며,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캐나다의 언론지원정책은 언론진흥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고,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법안이 10여년 이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정부광고법 12월 13일 시행 수수료, 요청기관이 부담

나눠먹기식 배분 차단 위해 ABC공사 결과 활용 수수료율 일률적 '100분의 10' 비합리적 지적도

국무총리 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이 12월 13일 시행됐다.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광고법은 '나눠먹기식 배분을 차단하기 위해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광고수수료율을 광고 성격,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해 개별 광고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로 정한 부분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광고법은 △적용범위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 교육행정기관까지 확대 △홍보 매체 선정 시 신문잡지의 경우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매체를 우선 선정 △문체부장관은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자료 요청 △정부기관의 유사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협찬 받은 사실을 고지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체부는 9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 결을 통해 11월 27일 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

시행령은 △문체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의 장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부수,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 제공 △문체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 요청 대신 ABC부수공사 결과활용 △문체부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언론재단에 위탁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 △언론진흥을 위한 수수료 사용 사업 명시 △정부광고자문위원회는 2021년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등이 주요 골자다.

앞서 신문협회는 지난 10월 17일 문체부에 제안한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ABC공사 결과를 기준으로 광고가 집행되어야 하며 △정부광고대행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광고료에 합산해 홍보매체에 지급하고 수탁기관(언론진흥재단)은 홍보매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수수료율은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이하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11일 회신을 통해 △홍보매체 선정 요건 보완 △수수료율은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해 검토 △정부광고통합시스템에 신문협회 adKAN(디지털 광고 전송시스템)시스템 활용 등 협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신문협회의 공개질의

히 높음. 2013~2016년 4년간 직원 가족의 건강검진 지원 등으로 178억 원 집행. 직원 복지는 좋지만 수신료가 총 수입의 40%가 넘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서는 안 됨. <출처:감사원 자료>

지금까지 지상파는 자구노력 촉구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다가 특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거세지자 지난달에야 방통위에 자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특혜를 겨냥해 부러부러 만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진정성이나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밝힌 자구 계획이 과연 중간광고를 허용할 만큼 합당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필요합니다. 방통위는 자구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하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켜본 후 중간광고 허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4. 지상파에 대한 방통위의 특혜 조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경영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의 핵심 이유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낮방송 허용, 2010년 가상-간접광고 허용, 2012년 심야방송 허용, 2015년 광고총량제 등 지상파에 특혜를 줄 때마다 등장해온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지상파의 콘텐츠 질이나 시청률, 경영이 나아진 바 없습니다. 국정농단 보도과정에서도 신문과 종편이 이슈를 주도했을 뿐, 지상파는 존재감 없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 아닙니까?

5. 부처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까?

중간광고 도입은 법제상으로는 방송법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한 부처의 시행령이지만 사실은 신문, 유료방송, 잡지 등 전 매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 정책의 전반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습니까. 신문·유료방송 등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2018년 12월 17일

경향신문·국민일보·내일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머니투데이·문화일보·브릿지경제·서울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스포츠서울·스포츠조선·아시아경제·아주경제·이데일리·전자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경제·한국일보·헤럴드경제·뉴스1·연합뉴스·강원도민일보·강원일보·경기일보·경남신문·경남일보·경북도민일보·경북매일신문·경북일보·경상일보·경인일보·광주일보·국제신문·대구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영남일보·울산매일신문·전라일보·전북도민일보·전북일보·제주신문·중도일보·중부매일신문·중부일보·충청투데이·한라일보(이상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의 발행인 일동

포털도 '독과점 실태조사'

▶ 1면에서 계속

위원들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목적으로 포털 시장현황 파악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우선은 경쟁상황평가보다는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실태조사는 전반적인 시장현황 뿐만 아니라 사후규제가 필요한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이의 피해행위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도 포함됐다.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 제출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

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계보고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 등 통계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부가통신시장 현황 파악에 적합하도록 통계보고 양식을 개선하고, 방통위에 대해서도 통계보고 의무 부과 등을 제시했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담아 12월 13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공동체 정신으로 당면현안 해결할 것”

발행인포럼 송년모임, 전·현직 발행인 44명 참석

신문발행인포럼 송년 오찬 행사가 44명의 전·현직 발행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6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에서 열렸다.

이병규 신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정신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포털 정상화 문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지상과 중간광고, 프레스센터 언론계 환수 문제 등 신문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우리 신문인들의 힘을 모두 모아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야 하겠다”며 “이럴 때일수록 전직 발행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소중한 자산이다. 오늘 후배 발행인들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학래 전 신문협회장(전 한겨레신문 발행인)은 건배제의를 통해 현직 발행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발행인들의 건강과 신문산업의 발전을 기원했다.

1. '2018 신문발행인포럼'에 참석한 전·현직 발행인을 허승호 사무총장이 소개하고 있다.
2. 포럼장에 입장하는 최승익 전 강원일보 발행인을 이병규 회장이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3. 최학래 전 신문협회장이 신문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4. 신계숙 배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중국음식과 중국문화'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5. 전·현직 발행인들이 행사 시작에 앞서 그동안의 안부와 신문업계 동향 등에 관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한편 포럼에서는 오찬에 앞서 신계숙 배화여자대학교 전통요리학과 교수의 '중국음식과 중국문화'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참석자 명단 (가나다 순)

전직 발행인(26명) △경향신문 장준봉 △문화일보 김진현 △브리징경제 최종천 △서울경제 임종건 △서울신문 이동화 전만길 △세계일보 김병수 유종관 이동한 △스포츠서울 송대수 △전자신문 박성득 △중앙일보 이재준 △한겨레신문

최학래 △한국일보 이종승 △헤럴드 김경철 박학환 이정우 △강원일보 최승익 △경남일보 이연근 △경북도민일보 정의화 △경상일보 신원호 △경인일보 김명수 △국제신문 송석구 △대전일보 윤종서 조준호 △영남일보 성낙오 **현직 발행인(18명)** △경향신문 이동현 △내일신문 장명국 △매일경제 손현덕

△문화일보 이병규 △세계일보 정희택 △스포츠서울 유지환 △아주경제 광영길 △헤럴드경제 권충원 △뉴스1 이백규 △연합뉴스 조성부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경기일보 신항철 △경북일보 한국선 △대구일보 이후혁 △부산일보 안병길 △전북도민일보 임한 △전북일보 서창훈 △중도일보 김원식

구독 신청 페이지는 단순·간결하게 만들어라

API, 구독 등록 및 지불 방법 개선 6가지 방안

“언론사 구독 등록 웹페이지 전략의 핵심은 간결하다. 독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과정을 최대한 단순하고 채워야 할 항목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이는 지난 28일 미국언론연구소(API)가 언론사 유료 독자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구독 등록 및 지불 방법 개선 방법을 홈페이지에 소개한 내용이다.

①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하기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의 가입 페이지는 따뜻하고 친근한 문구

(예:환영합니다. 당신의 구독 결정에 감동했습니다)와 함께 이메일 주소만을 요구해 간결하다. 요구사항이 많을수록 가입을 포기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러한 전술이 효과적이다.

② 글머리 기호로 문구 단순화

아무리 간결한 가입 페이지라도 필수적인 정보는 전달해야 한다. 글머리 기호 또는 아이콘을 사용하면 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뉴욕타임스는 가입페이지에 중요한

정보를 글머리 기호로 제시하고 있다.

③ 명확한 가치 제시

사용자는 구독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가입 페이지에는 이러한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열망에 호소한다. ‘회원’ 단어를 사용해 엘리트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자에게 어떤 독점적 가치를 가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④ 다양한 보안 결제 옵션 제공 언론사는 파트너십을 통해 독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가입 페이지는 ‘페이팔’, ‘아마존페이’ 및 4가지 신용카드 결제 옵션을 제공한다.

⑤ 모바일 친화적 페이지 만들기 독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을 통해 새로운 가입자를 등록할 기회가 커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모바일 페이지 위, 아래에 가입을 유도하는 콜투액션(call-to-action)을 제시하며

눈에 띄는 색상으로 통일시킨다. 아래 광고에는 구독할인 및 시험 등록을 제공한다고 명시한다.

⑥ 고객 서비스 섹션에 빠른 접근 제공

독자는 등록 절차 및 구독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는 고객 서비스 섹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입 페이지 하단에 몇 가지 FAQ를 제공한다. 뉴욕타임스는 실시간 채팅을 통해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면서 일대일 관계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젊은 독자 확보에 성공한 덴마크 지역 신문사

신문사가 직접 학교에서 7주 간 저널리즘 수업

미국 저널리즘 연구 기관 ‘론펜스트 연구소(The Lenfest Institute)’는 지난 11월 1일 지역 학교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 독자 확보에 성공한 덴마크 지역 언론사 ‘핀스 헤럴드 트리뷴(Fyens Stiftstidende)’의 사례를 소개했다. 덴마크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큰 ‘유스큐 푸스케 미디어(Jysk

Fynske Medier) 그룹이 발행하는 이 신문사는 약 1만5천 명이 거주하는 미들파트(Middelfart) 지역의 한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학생들을 위한 저널리즘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를 맡은 편집 개발 책임자인 게르드 마리아 메이(Gerd Maria May)는 “젊은층이 관심 있

는 지역 보도를 다룸으로써 젊은 독자들이 지역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시행 배경을 밝혔다. 메이는 교사·연구원들과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 협력했고, 사실 확인 방법, 기사 작성법, 해결책 중심의 언론 접근법 등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대한 교육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일주일에 4시간씩 7주간 진행된 저널리즘 수업에는 10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수업 초기에 학생들과 워크숍을 개최해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세 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3가지 과제는 ①지역 내 청소년 센터 개선(실제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음. 청소년들은 더 재미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센터를 만드는 데 관심을 보였음) ②대중교통 확대(18세 이전에는 자동차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5면에 계속 /

‘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 게재하도록 강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언론의 편집권 훼손

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때 정정보도문을 신문 1면에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언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월 29일 박광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정보도문을 △신문은 첫 지면에 게재 할 것 △방송 등은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채

널의 프로그램 시작 시 자막과 함께 △뉴스 통신·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면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문협회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정정보도문의 게재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으로 강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신문의 1면은 지면이 제한된 관계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나 국민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축약적으로 게재하고 있다”며 “모든 정정보도문을 1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신문의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독자의 알권리를 제한해 기대 법익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전 일정시간 정정보도 방송을 하더라도 특유의 분절(分節)성으로 인해 본 방송과 구분되고, 잡지의 경우도 정정보도 지면과 본 지면이 분명히 분절된다. 하지만 신문은 정정보도와 신규보도가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동시성으로 인해 신뢰도 등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신문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끝으로 “대부분의 해외 언론사들은 자체적으로 정정보도 게재방안을 마련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언론사의 편집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정정보도를 알림으로써 정정보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전수조사는 불가능했지만 학계와 언론중재위 등에 확인해본 결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1면으로 강제하는 해외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신문사 자율로 정정보도를 통상적으로 2면 지면에 정형화된 형식으로 보도하고, 온라인 정정기사의 경우 별도의 정정보도(Corrections) 메뉴와 해당기사에 관련 사실을 표시하고 있다.

신문협회 회원사 발행부수 768만 9465부

전년대비 발행·유료부수 소폭 감소

2018 ABC부수공사 결과 발표

2017년 신문협회 소속 50개 회원사(뉴스1, 연합뉴스 제외)의 총 발행부수는 768만 9465부로 집계됐다.

총 유료부수는 592만 7066부. 2016년과 비교해 발행부수는 72,694부(0.94%), 유료부수는 4,591부(0.08%) 각각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사결과 재경사 12곳, 지방사 17곳 등 29개 회원사의 발행부수가 늘었으며, 유료부수는 재경사 15곳, 지방사 17곳이 늘었다. 발행부수와 유료부수가 모두 증가한 회원사는 24개사였다.

한국ABC협회는 12월 7일 신문부수 인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공사결과를 인증·발표했다.

ABC협회가 이날 발표한 전국 일간지 164개 신문의 총 발행부수는 963만 1921부, 총 유료부수는 719만

3019부이다. 이 가운데 신문협회 소속 50개 회원사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비중은 각각 79.8%와 8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조사 대상기간은 2017년 1~12월이며 공사는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에는 종편·케이블방송 등에 참여한 25개사를, 하반기에는 참여하지 않은 1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성겸 인증위원(전 한국언론학회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종이신문의 유통 및 발행부수는 감소해왔는데, 한국의 경우는 유통부수가 소폭 감소세를 보여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하락세가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ABC조사결과와는 디지털 시대에도 종이신문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2018 신문협회 회원사 발행·유료부수 현황 (재경·지방사별 2017년 유료부수 순)

신문명	2016년분		2017년분		신문명	2016년분		2017년분	
	발행부수	유료부수	발행부수	유료부수		발행부수	유료부수	발행부수	유료부수
조선일보	1,513,073	1,254,297	1,458,614	1,238,548	영남일보	74,468	47,429	75,019	48,982
동아일보	946,765	729,414	959,260	736,546	강원일보	60,214	43,455	60,697	43,502
중앙일보	978,798	719,931	970,968	726,390	경인일보	54,814	37,263	53,097	34,898
매일경제	705,526	550,536	707,292	551,234	경남신문	41,542	32,513	42,354	33,356
한국경제	529,226	352,999	530,075	357,526	강원도민	41,500	32,665	41,500	32,557
한겨레	239,431	202,484	232,025	200,223	대전일보	40,094	29,976	37,511	30,049
문화일보	177,887	163,090	184,303	169,911	광주일보	32,849	25,538	33,887	26,261
경향신문	196,174	165,133	192,237	165,618	경기일보	32,244	24,960	32,975	25,148
한국일보	213,278	159,859	219,644	165,240	전북일보	26,000	20,006	26,000	20,088
국민일보	185,787	138,819	185,879	138,445	충청투데이	26,020	17,580	26,020	18,127
서울신문	164,446	116,028	165,617	116,843	경남일보	20,127	15,057	21,072	15,666
스포츠조선	158,220	124,044	135,275	107,339	전북도민	17,233	12,892	17,417	13,599
스포츠서울	144,345	109,427	128,516	99,850	충도일보	21,251	11,750	22,049	12,670
머니투데이	86,502	66,288	85,634	68,051	경상일보	21,791	13,475	20,801	12,471
세계일보	101,269	67,758	97,074	67,772	한라일보	19,804	12,709	20,185	12,111
서울경제	84,635	57,955	86,735	60,218	제주일보	22,460	12,568	21,000	12,044
전자신문	61,748	49,054	63,193	49,454	충부일보	19,477	10,816	22,943	11,934
내일신문	50,740	45,917	51,974	44,456	경북일보	23,301	11,097	24,872	11,017
헤럴드경제	55,469	42,371	54,738	39,507	경북매일	20,500	10,600	20,501	10,791
아시아경제	35,000	26,137	35,015	26,578	울산매일	16,500	10,006	16,500	9,654
이데일리	33,492	17,179	34,733	18,703	대구일보	18,000	9,705	18,000	9,410
아주경제	23,083	16,151	23,000	16,937	경북도민	11,450	6,630	11,450	6,641
브릿지경제	20,000	5,092	20,000	4,677	충부매일	10,080	6,300	10,946	5,990
부산일보	142,421	113,565	143,084	113,703	전라일보	9,100	5,498	8,500	5,120
매일신문	123,396	96,479	123,495	97,156	계	7,762,159	5,931,657	7,689,465	5,927,066
국제신문	110,629	81,162	115,789	84,055					

4면에서 계속

청소년들은 대중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대중교통은 이용 시간이 제한적임) ③정신 건강 서비스(청소년들은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함) 등이었다.

프로젝트에는 신문사 기자 및

편집자도 적극 참여했으며, 특히 기자 한 명은 일주일 동안 학교에 상주해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7주 간의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신문사는 ‘해결의 방(the Room of Solutions)’이라는 이벤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장, 대중교통 책임자, 청소년 센터 소장 등 학생들

이 다룬 이슈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그동안 학생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을 같이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며 다시 참여하

기를 희망했다.

저널리즘 수업과 이벤트에 드는 비용은 은행의 후원을 받았다. 은행은 공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돕고 싶다고 밝혀 왔으며, 이번 프로젝트에 2만5천 덴마크 크로네(3천8백 달러, 한화 약 430만 원)를 지원했다.

신문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①젊은층에게 (이슈 선정 등의) 권한을 줄 것 ②관계 구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것 ③후원 모집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할 것 ④학생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등을 제시했다.

신문사는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구축해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회원사 동정

국민, 베를리너로 판형 변경
국민일보(발행인 변재운)가 12월 3일부터 베를리너 판형(323×470mm)으로 변경했다. 2001년 1월 대판에서 USA투데이 판형(345×576mm)으로 전환한 뒤 17년 만이다.

동아, 토요일 제호 공모
동아일보(발행인 임채정)가 토요일 제호를 공모한다. 응모자는 붓, 연필, 색연필, 물감, 수채화, 유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한 밑그림을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보내면 된다.

세계, '다문화 정책 대상' 공모
세계일보(발행인 정희택)는 제6회 '다문화 정책 대상'을 공모한다. 대상은 다문화 정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기관이며, 접수는 2019년 1월 31일이다.

한국, '2018~19 중독예방 공모전'
한국일보(발행인 이준희)는 도박, 스마트폰, 게임 등에 대한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예방하기 위해 '2018~19 중독예방 공모전'을 실시한다. 접수마감은 2019년 1월 21일.

대전, '랩 마스' 개관
대전일보(발행인 남상현)는 6일 본

사에 복합문화예술공간 '랩 마스'를 개관했다. 랩 마스는 청년들의 카페, 전시회, 강연 등의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는 공간을 지향한다.

매일, '2019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매일신문(발행인 이상택)은 2019년 1월 2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대구·경북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대구·경북지역 내 각 계 지도급 인사 및 출향인사다.

부산, 해운대 북극곰축제
부산일보(발행인 안병길)는 2019년 1월 5~6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제32회 해운대 북극곰축

제'를 개최한다. 접수마감은 12월 21일까지이며, 참가비는 2만원.

제주新보, 국제청정에코마라톤
제주新보(발행인 오영수)는 '2019 국제청정에코마라톤대회'를 2월 23일 개최한다. 종목은 풀코스, 하스코스, 10km, 5km이며, 접수마감은 1월 4일이다.

한라, '2019 제주인명록' 발간
한라일보(발행인 강만생)는 5일 제주관련 인사 3600여명의 이력을 집대성한 '2019 제주인명록'을 발간했다. 2004년 첫 발간한 제주인명록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신년 발행인 세미나

1월 10일 부산서

신문협회는 내년 1월 10~11일 (목~금)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9 신년 발행인 세미나'를 갖는다.

"디지털미디어그룹 혁신"

국민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국민일보(발행인 변재운)는 10일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창간 30주년 기념식(사진)을 열었다.

조민재 회장은 환영사에서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간 당시 초심으로 되돌아가 새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바르고 정직하게, 또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정론지로서 새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회장은 직원들에게는 "종래의 신문사 틀을 과감히 벗어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디지털미디어그룹으로 혁신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발행인 동정

박종면 머니투데이 발행인은 6일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제14회 u클린 초중고 글짓기&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이중환 서울경제 발행인은 11월 29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한국부동산금융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했다.

고광현 서울신문 발행인은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지방재정개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발행인은 11월 29일 오펜리스 컨벤션에서 열린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2018 송년의 밤' 행사에서 '2018 자랑스러운 한양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유지환 스포츠서울 발행인은 6일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8 스포츠서울 올해의 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구원모 전자신문 발행인은 7일 슈퍼겐코리아 슈퍼겐홀에서 열린 '제10회 대학(원)생 ICT논문 & 발명PPT 공모 대제전'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김기웅 한국경제 발행인은 7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인재포럼 2018'에서 개회사를 했다.

이희중 강원일보 발행인 11월 29일 영월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열린 '제3회 영월 전국드론영상사진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회사를 했다.

최광주 경남신문 발행인은 2일 양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4회 양산전국하프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출발 버튼을 눌렀다.

김화양 경인일보 발행인은 6일 본사에서 열린 '제37회 경인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박무성 국제신문은 발행인은 5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아카데미 총원우회 송년의 밤 및 15기 수료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이후혁 대구일보 발행인은 11월 30일 청도군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강당에서 열린 '제9회 경북문화체험 전국수필대전&UCC 공모전'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이상택 매일신문 발행인은 11월 30일 경주 화백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영호남문화예술관광박람회' 개막식 및 전시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서창훈 전북일보 발행인은 1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열린 '2018 순창 강천산배 전국오픈 탁구대회' 개최식에서 인사말을 했다.

강만생 한라일보 발행인은 1일 제주한라대 금호세계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한라일보 송년축제'에서 축사를 했다.

2018 관훈언론상 수상작 발표

관훈언론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남시욱·김민환)는 2018년도 관훈언론상(36회) 4개 부문 수상작을 10일 발표했다. 권력 감시 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갖는다. 부문별 수상작은 아래와 같다.

사회 변화 부문
서울신문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탐사보도 / 유영규·임주형·이성원·신용아·이혜리 기자

국제 보도 부문
연합뉴스 '프랑스 내 한국독립운동사 재발견' 연속보도 / 김용래 파리특파원

저널리즘 혁신 부문
한겨레신문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 시리즈 보도 / 변지민·정환봉·최민영 기자

신문협회보

회장 이병규
사무총장 허승호
발행처 한국신문협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더 높은 품질, 더 넓은 세계...

최고의 신문인쇄
KORINK가 약속 드립니다.



KORINK 한국신문인쇄(주)
www.korink.com